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2/14℃ 목포 1/12℃ 여수 4/12℃

단기 4344년 (음력 1월 2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910호 1판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100대 요직 영남 41명·호남 12명

MB정부 3년, 호남 인맥 쇠퇴…향토기업 몰락 등 불안감 커져

균형발전정책 후퇴로 지역민심 악화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지만 이를 바라보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중앙 부처와 공기업 등에서의 지역 인맥 쇠퇴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약화, 향토 기업들의 몰락 등이 맞물리면서 상대적 소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시작됐던 영남 편중 인사는 정권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개선될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출신의 김황식 국무총리가 중용되기는 했지만 중앙 부처 핵심 요직과 공기업 등에서 광주·전남 등 호남 인맥의 소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1급 비서관 이상 16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36%(60명)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 출신은 14%(2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21일 제시한 '이명박 정부 100대 요직, 출신 지역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영남 출신은 41명에 달하는 반면 호남은 12명에 머무르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5개 기관의 수장 자리도 영남 인맥이 44%(36명)나 장악하고 있는 반면 호남 인맥은 12%(9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불균형 인사는 예산이나 정책 등에서 상대적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장기적으로 호남 인맥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영남에 2개, 호남에 1개의 광역경제권을 두는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새해 예산안 날치기가 현실화되고 이 과정에서'형님 예산'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민심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 조선 등 지역 간판 기업들의 줄도산과 법정관리 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호남기업 죽이기' 아니냐는 볼 멘 소리마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여수 엑스포와 F1 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해안 선벨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 사업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영남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인사에서는 너무 편중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영남 정권에서의 호남 배려는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종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다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인 아카렌가(赤煉瓦·붉은 벽돌) 창고는 매일 수천명의 방문객들로 넘쳐난다. 창고 1호·2호관과 양 건물 사이의 빙상장 아트링크에서는 음악공연과 마술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매일 열린다.

낡아서 헐릴 뻔한 근대건축물이 요코하마를 창조도시로 살렸다

요코하마=글·사진 윤현석기자

'창조도시'를 표방해온 일본 요코하마는 지난 40년동안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도시 이미지 변신을 꾀해왔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지는 도시재생의 모델로 자리잡았다. 〈시리즈 12면〉

낡아서 헐릴 위기에 처했던 근대건축물들은 도시 재생의 핵으로 탈바꿈했다. 항만에 위치한 물류창고, 은행, 기업체 건물과 가스등, 단선철로 등 근대 유산들을 하나의 띠처럼 연계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져 평일에도 수만명의 시민과 외지인들이 찾는 명소로 만든 것이다.

22일 오후 1시10분 평일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렌가(붉은 벽돌) 창고 2동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10~20대 등 수천명의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다. ▶2면으로 계속

chadol@kwangju.co.kr

북구 풍향·두암·중흥·우산 5000명→동구 북구 동림·운암1동 일부 1만6000명→서구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분과위 잠정 결정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결과 동구와 서구의 인구를 각각 11만명과 32만명선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자치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는 22일 오후 2시 도심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구간경계조정분과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지역 1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잠정 결정했다.

경계조정분과위는 산과 하천 중심이었던 기존의 구간 경계를 도로 중심으로 바꿔 생활권과 행정권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편입지역 주민 동의가 변수로 남아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잠정 결정 안에 따르면 북구 풍향·두암·중흥·우산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되면서 북구 주민 5000여명이 동구로 옮기게 되며, 동구 산수 2동 일부(620여명)는 북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남구 방림동 일부(600여명)는 동구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동구 인구는 5000여명이 늘어 인구 11만명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구의 경우 북구 동림동과 운암 1동 일부(1만6000여 명)가 서구로 편입되고, 서구 양동 일부(700여 명)는 남구로, 서창동 일부(200여 명)는 광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서구 인구는 32만명으로 늘어나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2인 선거구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는 현재 인구가 30만3219명으로, 내년 총선에서 인구 하한선(30만9279명)에 미달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통합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8명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의 경계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안은 최근 강운태 시장과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 등이 회동을 가지면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는 이날 구간경계조정분과위에서 확정된 경계조정안을 오는 24일 도심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이 안을 1단계로 확정하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2단계 구간 경계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 분과위원은 "앞으로 도로 중심으로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을 맞추는 것이 이번 경계조정안의 주요 기준이 됐다"며 "하지만,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초중고 교원평가 내달 전면 실시

광주·전남 교육청도 수용

내달 새학기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관련기사 6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은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들의 참여로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교감·교장의 경우 학교경영,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이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